

신 바젤 협약 도입에 따른 우체국 예금 대응방안

심 연 주*

외환위기 이후 금융당국은 다양한 금융 리스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강화된 자본규제 방식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일률적인 규제 적용은 지방은행 퇴출과 같은 결과를 가져 왔으며 동아시아 전체로 연차적인 부작용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일률적인 규제 적용 방식에 대한 수정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고, 그 결과 수정된 신 바젤 협약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우체국금융 역시 신 바젤 협약 도입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본고는 끊임 없이 변화하는 국제금융시장 규제제도에 대응하여 우체국예금이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요소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I. 서 론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은행이 도산한다는 것은 믿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계의 오랜 전통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무너지기 시작하여 정부의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사상 초유의 은행 퇴출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통해 자산 부채이전방식에 미달한 경기은행, 동화은행, 동남은행, 대동은행, 충청은행 등 5개 은행을 퇴출 조치하였다. 이때부터 국제결제은행(BIS)¹⁾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위험지수와 경쟁력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자리

*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연구원

1)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 1930년 스위스바젤에 설립된 중앙은행간의 국제금융기구
- 회원은 55개국 중앙은행이며 우리나라는 1997년 정식 가입

매김하였으며, 금융권내에서는 자산평가형식에 의한 차별적 은행경영을 앞 다투어 추진하게 된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은 금융상의 위험도 증가와 다양해진 리스크(risk)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강화된 자본규제방식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모든 금융기관에 이러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어디까지나 국제금융시장 상황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기준치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영업하는 지역은행들에 대하여 이러한 산정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만은 아니며 동아시아 전체로 불거진 연차적인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바젤 협약의 수정안에 관한 논의가 확대되었으며 마침내 신 바젤 협약이 추진되게 되었다. 우체국금융도 신 바젤 협약 도입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본고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금융규제 변화에 대응해 우체국 예금이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가기 위해 준비해야할 요소가 무엇인지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II. 바젤 협약

1.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의 성립배경과 의의

1960년대 이후 세계적인 경기호황에 따른 금융기관의 규모 확대와 금융기관간의 경쟁 격화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높은 레버리지를 통한 성장전략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자산규모는 급격히 팽창한 반면 자기자본규모는 이에 비해 비례적으로 증대되지 못하였고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이를 보여 왔다. 197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금융정책 운용에 있어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중시함에 따라 금리자유화, 은행 업무에 대한 규제완화, 국가간 자금이동의 자유화, 조달 및 운용에 있어서의 증권화 등 금융규제의 완화 및 국제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감소와 함께 세계적인 금리 및 환율변동 파동을 겪으면서 금융기관들의 위험증대와 함께 금융기관의 공신력 및 지급능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자유화로 인한 경쟁심화는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키게 되고 금융기관은 이를 보전하기 위해 고수익 고위험 위주의 자산운용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자산의 질이 저하되었고 자금공여 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외거래를 대폭 늘림에 따라 잠재적 위험도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국가간 자본이동의 자유화는 외국환시세의 변동에 따르는 환 위험 및 국가위험을 증대시켜 국제은행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규제 감독위원회(바젤위원회)²⁾는 1988년 7월 「자기자본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제정하였다. 바젤위원회의 합의는 상업은행의 신용위험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제적인 은행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국제 업무를 영위하는 상업은행들 간의 경쟁조건의 형평성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0~100%까지 차등 부여한 은행의 보유자산으로 자기자본을 나누어 산출하는데 지급보증, 입찰보증, 배서어음 등 부외자산거래도 자산항목에 포함시키며 자회사와 관계회사의 재정을 포괄하여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1988년 국제결제은행의 바젤위원회는 자기자본의 목표비율을 보완자본을 기준으로 할 경우 8%, 기본자본을 기준으로 할 경우 4%로 설정하고 회원국에 대해 1990년 말까지는 동 비율을 7.25%, 1992년말 부터는 8%이상을 유지하도록 제시하였다.

은행은 거래대출처의 부도 등으로 인한 신용리스크, 시장금리 등락에 따른 자산가치의 변동 등으로 인한 시장리스크, 내부직원의 횡령이나 경영실수 등으로 인한 운영리스크 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이 관리 가능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은행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은행의 위험부담행위에 대해 감독상의 제한을 가하거나 은행자체의 위험측정 및 관리 능력의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규제는 감독당국의 은행에 대한 건전성감독의 일환으로서 은행이 경영에 수반되는 여러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충격 또는 손실을 흡수하는데 필요한 자본을 보유토록 규제하는 것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2)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 은행감독업무의 국제협력과 국제적 기준 제정을 위해 1974년 설립된 BIS 산하의 별도 위원회
- 회원은 13개국의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이며 우리나라는 비회원

위험관리 측면에서 은행의 자본은 규제자본(regulatory capital)과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규제자본이 위험에 대비하여 은행이 보유해야 할 규제목적상의 최저자본을 의미한다면 경제적 자본은 은행이 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흡수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자본을 의미한다. 자기자본규제의 유효성은 은행의 위험과 이에 따른 경제적자본의 수준이 규제자본의 수준에 얼마나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규제자본의 수준과 실제 필요한 경제적자본의 수준 사이에 괴리가 클수록 규제자본회피거래(regulatory capital arbitrage) 유인이 발생한다.

2. 우리나라의 적용 사례

1992년 7월 국제결제은행(BIS) 규정에 의거하여 산출된 위험가중 자기자본비율을 매 회계연도에 각 은행이 은행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이 의무화되었으며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은행에 대해 은행감독원장이 경영합리화 조치나 경영개선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경영합리화 조치는 인력 및 조직 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점포관리의 효율화, 고정자산투자 및 신규투자의 제한 등을 포함한다. 경영개선 조치는 최저자기자본비율이 2년 이상 현저하게 미달되는 경우 유상증자의 실시, 이익배당의 제한,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점포의 폐쇄 통합 또는 신설의 제한, 신규투자의 동결, 위험 자산의 보유제한 및 자산처분이다.

외환위기 사태 이후로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인수방식으로 대동, 동남, 동화은행 등 3개 시중은행과 경기, 충청은행 등 2개 지방은행 등 5개 일반은행을 퇴출시켰다. 또한 1998년~1999년도에 걸쳐 한국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은 한빛은행으로 합병되었고, 보람은행과 하나은행,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 조흥은행과 강원은행 및 충북은행 등이 각각 상호 인수 또는 합병되었다. 당시 은행 경영성과의 판정기준은 크게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자본의 적정성, 은행의 수익성 등이 지표였다. 그동안 은행은 상업성 못지않게 공공성도 중요시했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경영성과에 기초하여 정리은행을 선정한 것은 은행산업에 있어서 큰 변화이며 경영성과 판정 및 은행퇴출 결정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요인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었다.

당시 금융기관은 경영지도기준에 의하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8%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8%미만인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6%미만인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 2%미만인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되어 이에 따르는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작년과 금년에 경쟁적으로 후순위채³⁾를 발행하였다. 문제는 후순위채 금리가 일반 정기금리보다 2%나 높아 가뜩이나 취약한 은행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도 우량은행들은 연말결산을 앞두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고 앞다퉀 후순위채를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만 높다고 해서 은행건전성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나치게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높으면 오히려 자산운용이 비효율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의식해 위험가중치가 낮은 국공채 매입이나 주택금융대출에만 치중하다보니 자산운용 효율이 떨어지는 외에 만기구조가 편중되는 등 자금흐름이 왜곡돼 중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연말결산을 앞두고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완자본으로 인정해 주는 후순위채를 발행하거나 대출을 회수하는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후순위채 발행은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미 한도까지 발행하였기 때문에 남은 방안은 여신을 회수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국민경제나 개별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은행 독자적으로 실행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⁴⁾ 체제이후로 나타나는 현상은 은행의 자기자본이 주가, 신용등급이라는 시장평가와 관련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의 경우 주가와 신용등급이 은행 경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은행차별화가 적어 주가나 신용등급이 은행경영에 주는 중요도가 적은 편이다.

3) 기업이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진 빚(은행차입금, 물품대금, 회사채등)을 모두 갚은 후에야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

4) International Monetary Fund: 환율과 국제 수지를 감시함으로써 국제 금융 체계를 감독하는 것을 위임받은 국제기구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나라 서구식 보상체계에 의해 스톡옵션⁵⁾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은행경영과 주가, 신용등급이라는 시장평가와의 관련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고주가는 적은 주식발행으로도 자금조달을 늘릴 수 있으며 그 결과 주당 순이익이 희박화 되는 것을 방지하여 증자를 유리하게 전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스톡옵션의 본격화를 통해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우수한 경영진과 실무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시장평가의 중요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더욱 더 시장 세력에 의한 은행산업의 전반적인 개편이 일어날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매수전략을 공고히 다져야하며 주가 수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은행의 자기자본관리가 중요 목표로 부각될 것이다.

3. 기존 자기자본비율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자기자본비율의 적용은 그 역할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자면 1988년 7월에 채택된 1차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규제는 은행의 신용위험관리를 통해 국제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은행에 최저 자기자본비율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은행으로 하여금 저 위험자산을 보유토록 유도하기 위해 위험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제1차 규제제도는 주로 신용위험을 중심으로 제정되었으나, 이후 금리, 환율, 주가 등 거시경제변수가 은행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급속한 발달로 자기자본비율이 은행의 재무상태를 적정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즉 자기자본비율은 차주 간 신용위험의 차이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경제적 위험을 개략적으로 측정하는데 그쳤다.

1차 규제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은행이 실제 경제적 위험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의해 산출된 위험간의 괴리를 이용하여 자기자본 규제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 있었다. 자산의 증권화 등을 통하여 자기자본 규제 회피거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일부 은행의 포트폴리오

5) 기업에서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자사의 주식을 미리 약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

가 고위험자산에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세분화하여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자본비율 설정상의 문제이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은행 감독당국이 위험관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여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게 되는 노력 자체는 의미가 있으나 이 자체가 규제철학의 본질적인 전환으로 볼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여러 가지 타입의 위험의 분산과 조합을 가능하게 하는 증권화나 신용위험 헤지 기능을 가지는 신용관련 파생상품⁶⁾이 요즘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기존 자기자본비율 규제 경직성에 기인하는 문제점이 한층 더 심각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자기자본비율의 수준을 수익성의 관점에서 볼 때 자본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차입금의 비용보다 수익이 되는 사업이 있으면 차입금을 활용해 보다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므로 그것은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의 기업전략 그 자체일 것이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것이 지나친 경우는 안정성은 있지만 소극적이고 기동력이 없는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낮은 것이 지나친 경우에는 경영의 안정성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며 중요한 점은 적당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적당한 밸런스를 어디에서 판단하는 것인지 그 해답은 경상 이익이나 자산의 건전성 등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둘째, 위험가중치의 획일성이다. 시장위험에 관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내부 모델이 인정되었지만 신용위험을 다루는 것에 대한 규제방식은 지극히 경직적이다. 즉 분모의 자산위험을 산출할 때의 위험가중치의 경우 민간용 대출이 일률적으로 100% 또 주택모기지가 일률적으로 50%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위험비중을 당국이 사전에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각각의 금융기관의 신용 위험 관리와 반드시 정합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간용 대출이라고 해도 각각의 부도율은 개개의 금융기관마다 다르면 대출 처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대출타입마다 부도율에 관한 위험관련 기본 자료가 존재하는 미국에서는 주택모기지의 부도율은 좀 더 낮은 실증분석도 있다. 은행 감독당국이 나타내는 이와 같은 획일적인 위험가중치는 은행이 자행의 신용위험에 따른 위험관리를 충실히 하게 해 나가는데 있어서 커다란 폐해가 될 가능성이

6) 국공채, 통화,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자산가치 지수의 변동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 계약

높다.

셋째, 건전성 척도로서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에 있다. 자기자본비율은 그 목적인 자산의 건전성을 보증하는 척도로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미국의 은행과 달리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은행처럼 아직 실현하고 있지 않은 유가증권평가액이 자기자본의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매우 불안정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주가의 수준에 따라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은 크게 변동하는데 이를 척도로 해 강력한 감독 조치를 발동하는 것은 가능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말 주가의 하락으로 자기자본 비율이 8% 이하로 떨어져 경영 개선 계획을 작성한 다음 시기에는 주가가 회복하고 8%는 물론 우량 은행이라고 하는 10%대에 도달하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

수익성 면에서 보면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것은 새로운 수익 기회를 놓치고 성장기회를 잃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자본의 내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우량은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적정 자기자본비율 수준을 규정하는 자산의 건전성과 적당한 수익과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위험에 대한 은행의 관리능력에 대한 질문을 안 할 수 없다. 그것도 신용위험뿐만 아니라 업무위험, 시장위험 등에 관한 관리 기능이 서로 유기적으로 제휴를 하면서 적절하게 운용되어 있어야 한다. 거래규모가 거대화되는 경우 10%대의 자기자본비율이 보증이 되지 않고 곧 채무초과로 전락할 수도 있음은 영국의 베어링은행의 파산⁷⁾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7) 베어링은행(Barings Brothers and Co., Ltd.)은 영국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종합금융회사이며 1995년에 총자산 60억파운드, 총예금 30억파운드인 매우 보수적인 은행이었다. 그런데 베어링은행은 자회사인 베어링증권의 해외자회사인 베어링선물(싱가폴)의 종업원이었던 닉 리슨(Nicholas Leeson)의 파생금융상품의 불법거래에 따른 막대한 손실로 인하여 1995년 2월에 파산하였다.

※ 베어링은행의 파산이 주는 교훈

- 불법적인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내부관리통제제도와 감독당국의 적절한 감독의 중요성
- 파생상품의 특성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부족이 문제점으로 인식
-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헤지전략 이용 시 금융상품가격 변동 등에 대한 정밀한 통계적 분석이 필요

Ⅲ. 신 바젤 협약

1. 신 바젤 협약의 등장

국제결제은행(BIS)은 2004년 신 바젤 협약 최종안을 공식 발표하였다. 신 규제 제도에 대한 협의안(1차안)은 1999년 6월 최초로 공개되었고 이후 바젤위원회 참여국과 여타 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발표를 통해 2007년에 회원국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신 규제는 은행내부모형을 통한 자기자본규제, 감독당국의 점검, 공시의 3대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다각적이고 유연한 규제를 지향하는 등 기존 제도에 비해 다양한 모형 및 평가기법을 허용하고 있다.

기존협약 시행이후 은행들의 위험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신용파생금융상품 등 기존협약에서 고려하지 못한 새로운 신용위험완화(credit risk mitigation) 기법이 등장한데 반해 기존 협약은 규제자본 수준의 설정에 있어 은행들의 위험관리 능력 반영 장치를 결여하고 있었다. 이는 위험의 경제적 평가에 기초한 은행의 효율적인 자본관리 및 위험관리 기법의 개발을 제약하고 은행의 규제자본회피거래증가를 초래하게 되었고, 바젤위원회는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규제자본 수준의 산정에 있어 위험도에 따른 차별화를 도모하고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위험측정 방식을 보다 정교히 설계함으로써 은행의 위험관리 능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신 협약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새로운 협약에서는 자기자본규제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guide line)의 제시 차원을 넘어 은행들에게 금융시장에서 위험관리의 최적관행(best practice)으로 인식되고 있는 복잡하고 정교한 위험관리 방식의 도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신 국제결제은행(BIS)기준은 시장리스크에 크게 노출된 은행이 그 노출된 리스크를 지탱할 수 있는 적절한 자기자본을 유지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 위원회의 회원국이 아니므로 신 국제결제은행(BIS)기준의 도입 의무는 없으나 최근 국내 금융환경의 급변에 따른 리스크 증대경향에 대비하여 할 필요가 있어 동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특히 리스크관리는 금융기관의 생존과 직결될 정도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신 국제결제은행(BIS)기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신 국제결제은행(BIS)기준은 현행 기준이 적용되는 은행 중 시장리스크에 대한 노출규모가

큰 은행에 대해 적용하게 되는데 국제적 영업을 영위하는 은행 중 연결기준(worldwide consolidated basis)에 의해 산출한 자산 규모에 비해 시장리스크 노출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은행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적용대상의 구체인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각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2. 신 바젤 협약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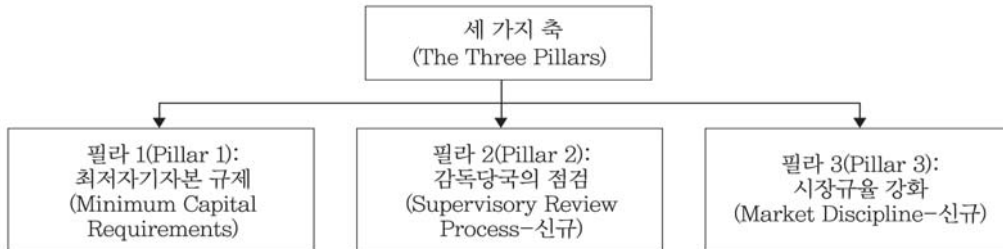
신 바젤 협약을 통한 개편 안에서는 개별 은행뿐만 아니라 지주회사를 포함한 전체 금융그룹 수준에서 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금융그룹의 모회사인 금융지주회사에도 신규제의 기본원칙들을 적용하도록 한다. 금융그룹 내 하위그룹 등 국제 업무를 활발히 영위하는 소그룹별로도 적용이 된다.

은행그룹 전체로만 자기자본 규제 시 그룹전체는 자기자본이 충분하더라도 그룹 내 개별은행 수준에서는 자기자본이 부족한 경우도 발생이 가능하다. 이밖에 은행이외의 증권사나 보험사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성격에 따라 제외(보험)시키거나 연결(증권)하여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신 규제는 국제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뿐만 아니라 국내업무만을 영위하는 은행도 적용하도록 규제내용을 개선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신규제의 기본원칙들은 어떠한 은행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방법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신규제의 시행은 개별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신 바젤 협약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제도와 마찬가지로 최저자기자본 규제(Pillar1)에서는 은행이 스스로 신용 위험과 운영위험을 측정하고 그에 따른 최저자기자본을 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였다. 또 시장위험 처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현행 제도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신 바젤 협약에서 새로 추가된 금융감독당국의 점검(Pillar2)에서는 은행이 측정한 위험과 그에 따라 자율적으로 산정한 최저자기자본 보유가 적정했는가를 감시토록 하였다. 시장규율(Pillar3)에서는 은행이 자신이 처한 위험에 상응하는 최저자기자본을 제대로 적립했는가를 감시토록해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그림 1) 신 바젤 협약의 구조



최저 자기자본규제는 자기자본의 범위, 위험노출금액(risk exposure)의 측정, 위험에 대응하는 자기자본 수준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관리대상이 되는 위험은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용리스크 등 3가지이다. 새로운 규제제도에서는 기존의 2가지(신용, 시장리스크)에 운용리스크를 추가하였다. 신 규제제도에서 채택한 자기자본의 정의는 현행방식과 동일하되 위험노출정도의 측정 시는 건전한 회계기준과 평가원칙 적용이 전제됨을 강조하고 있다.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의 최소비율은 8%로 현행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한편 신 규제제도에서는 기존 모형을 일부 수정한 표준화된 모형과 보다 정교한 내부 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현행 신용리스크 측정방식을 수정한 '수정표준모형'과 '내부모형'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개선하였다. 표준모형이란 외부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평가대상기관(국가, 은행, 기업) 및 평가대상 자산에 대한 등급을 이용하여 리스크를 측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내부모형은 소수 선진은행에 대하여는 리스크에 좀더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방법으로 정교한 정도에 따라 '기본모형'과 '고급모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당초 도입키로 하였던 '포트폴리오 신용리스크모델'과 '은행계정의 금리위험에 대한 자기자본 보유의무'의 부과문제는 차후의 도입과 제로 이연되었다.

감독당국의 점검은 최저 자기자본 규제와 시장규율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진다. 감독당국이 개별 은행의 자기자본 상태를 세부적으로 감시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이 자신의 위험노출 정도 및 특성, 전략에 부합하는지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점검하며 이

때 금융기관의 위험부담 경향 및 위험관리실적, 시장의 특성, 이익의 질과 변동성, 회계기준의 준수여부, 대내외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위치 등을 감안한다.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기에 개입할 수도 있다.

시장 규율 면에 있어서 새 제도는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감독체계와 충분한 공시를 확충하고 있다. 시장규율은 은행 및 금융시스템의 안전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기자본 규제와 감독당국의 여타 활동을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 시장규율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이 자신의 위험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손실에 대비한 자기자본과 리스크 노출금액(risk exposure) 등 양적·질적 내용을 포함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한다. 충분한 공시를 통하여 시장 전체로 위험이 퍼지는 전염효과(contagion effect)를 최소화할 수 있다. 공시와 같은 시장의 압력을 통해 해당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게 하고 금융시스템 전체로 위험이 번지는 위험을 억제한다. 이에 감독당국은 시장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지침을 개발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IV. 우체국 예금의 대응방안

1. 우체국 예금의 현황

현재 우체국 예금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수준에 맞추기 위하여 바젤 협약에 의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계산 중에 있으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2006년 「우체국예금·보험 건전성 기준(안)」을 마련하여 우체국 설정에 맞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분기별로 산출하고 있다.

〈표 1〉 우체국예금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

2007년 12월말 우체국예금 자기자본비율(BIS): 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체국예금 자기자본: 2조 3,725억 원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공제항목 ○ 우체국예금 위험가중자산: 18조 2,464억 원 – 신용위험 + 시장위험
$\frac{\text{자기자본 (2조 3,725억 원)}}{\text{위험가중자산 (18조 2,464억 원) = 신용위험 + 시장위험}} \times 100$

또한 신 바젤 협약에 맞추어 올해부터 신 규제기준을 적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며, 신 바젤 협약 중 최저 자기자본규제는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에 대해서는 표준방법을 적용 준비 중에 있으며, 운영위험은 고급측정법을 도입하고자 올해 시스템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

감독당국의 점검 부분에 있어서는 리스크실태평가(RADARS)⁸⁾를 준비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위험조정성과평가(RAPM)⁹⁾를 위한 시스템 도입을 내년 중에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시장규율 강화 부분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공시 기준에 맞추기 위해 2007년 이후 예금회계의 분리가 있었으며, 현재 예금사업단 내에 예금회계업무를 별도로 두어 우체국예금 건전성 관리 및 회계부문 관리를 시행 중에 있다.

2. 우체국 예금에 미치는 영향

우체국 예금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8) Risk Assessment and Dynamic Analysis Rating System

9) RAPM: Risk-Adjusted Performance Measure

– 위험-수익 조합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주어진 위험수준하에서 최대의 수익을 거두거나 일정 수익률 하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개념

첫째, 외부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영향이 증대될 것이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아시아 외환 위기시 아시아국가에 대한 뒤늦은 신용등급조정으로 위기를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 왔으며,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의 능력은 현재도 특정국가의 위기를 사전에 감지하여 이를 조기에 국가신용등급에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 협약안 중 은행에 대한 채권(claims on banks)의 위험가중치를 국가신용등급과 연계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 국제신용평가기관의 국가 신용등급조정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질 수가 있다. 특히, 대출이 없는 우체국 예금으로써는 다량의 은행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가 신용등급 조정에 따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의 변동이 커질 수 있다.

신 협약안은 은행에 대한 채권의 신용리스크 평가방법으로서 특정국가의 모든 은행에 소속국가의 국가 신용등급에 따른 위험가중치보다 한 단계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과 은행 자체의 신용등급에 따른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 등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특정국가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경우 그 국가에 소속한 모든 은행의 신용위험가중치가 일률적으로 상승하게 됨으로써 은행의 차입여건 악화로 인한 유동성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가신용 등급의 하락에 따른 자본유입의 감소와 은행의 유동성위기 초래 가능성 등은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 평가요소인 경제성장률, 금융시장의 건전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다시 국가신용등급의 하향조정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은행산업의 집중도가 높아질 것이다. 위험관리 및 전반적인 영업능력에서 표준방식을 채택하게 될 은행들에 비해 앞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내부신용등급 평가방식 채택 은행들은 신 협약안 도입 시 표준방식 은행에 비해 자기자본 부담 및 수익성 측면에서 경쟁상 우위를 더욱 확보하게 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은행간 인수·합병이 촉진되고 은행산업의 집중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우체국 예금의 경우 현재 대출업무를 시행하지 않으므로 무리한 내부등급법 적용은 큰 의미가 없으나, 향후 공사화 민영화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표준방법만을 고수할 경우 경쟁력에서 뒤쳐지게 되어 인수·합병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셋째, 자금조달여건이 악화될 소지가 있다. 선진국의 은행이나 기업은 평균적으로 현재보다

차입여건이 개선되는데 반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국가신용등급이 하위권인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현 국가신용등급 수준에서는 위험가중치가 높아 외국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여신을 축소하거나 조건을 보다 까다롭게 적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부, 금융기관, 기업 모두 조달비용이 상승할 전망이다. 각 은행, 기업별로 신용등급에 따라 선진국 금융기관들이 여신취급을 더욱 차별화하면 신용등급이 낮은 주체는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이후 평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평가 결과에 따라 차별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현재 오로지 국민들의 예금만으로 자금 조달을 하는 우체국예금은 향후 공사화 민영화에 의한 조달 확대에 따른 영업 확대가 필요하며 그에 따라 외환까지 영업을 확장할 때 외화 조달의 어려움은 곧 자금운용의 어려움으로 연결될 수 있다.

3. 시사점 및 대응방안

2006년 말부터 바젤위원회 회원국을 대상으로 도입될 신 협약은 신용, 운영, 시장리스크 등 은행영업의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은행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신 협약을 도입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에도 신 협약이 적용되는 선진 외국은행들과의 국제 금융거래를 통해 국내은행 및 기업들의 해외차입여건 등이 영향을 받게 되므로 신 협약 도입의 파급효과는 비단 바젤위원회 회원국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신 협약의 내용 및 주요 관련 이슈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시행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리스크관리 전문성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선진화되는 금융시스템에 맞추어 체계적 리스크관리를 위한 인력 확보 및 유지가 필요하고 리스크관리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를 추진하여 계량적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관련 교육지원, 사내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실시, 외부교육지원 확대함으로 우체국 예금의 리스크관리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신 바젤 협약과 같은 금융감독의 변동 내역을 조직 내 확산하여야 한다. 리스크관리 핸드북 발간 및 배포를 통해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디지털 포스트 등 간행물에 대한 계

재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 사내의 세미나, 워크숍 및 업무설명회 개최 지속 추진 등을 통해 변화하는 금융시장을 조직 내에 알려 조직의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선진적 리스크 관리기법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차후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리스크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금융시장의 제반 지표(환율, 금리, 주가) 및 개별 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실에 촉을 위한 기초데이터의 축적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신 규제제도에 대비하여 리스크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우체국예금이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대비해 리스크 측정모형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별은행의 경우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용리스크 등 리스크 측정 및 평가시스템이 적절치 못할 경우 경쟁에서 불리하게 된다. 따라서 우체국예금은 사후확인(Back-testing), 위기검증(stress-test) 등의 테스트를 실시하고 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적정성을 입증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만약 감독당국의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보수적으로 측정하는 표준모형을 적용함에 따라 필요 자기자본이 증대하게 될 것이다.

넷째, 외국자본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외국인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외자계 은행이 채권시장안정기금, 회사채신속인수제 등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에 대해 반발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최근 외자계 금융기관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의 여건변화로 정부의 직접적인 금융시장개입 시 마찰이 증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자계 금융기관들은 수익성을 우선하여 시장원칙에 배치되는 정책운동이나 금융시장개입에 대해 수용을 거부하므로 앞으로는 정부의 직접적인 금융시장 개입은 가급적 지양되고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다. 앞으로도 외국자본의 금융업 진출은 확대될 것이고 우체국예금은 선진금융기관과 치열한 경쟁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체국예금은 수익성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여야 할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공시정책의 보유 및 시스템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우체국예금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으므로 신 바젤 협약에 의한 감독 규정에 따른 정책이 보유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신 바젤 협약에 맞추어 공식적인 공시정책을 마련하고 공시절차에 대한 내부

통제체제를 실행하는 한편, 공시의 유효성과 공시주기를 포함한 공시의 적정성 평가 절차를 마련해야 될 것이다. 또한 공시요건 충족을 위해 경영정보시스템 개선 및 관리회계제도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V. 결 론

본 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국제금융시장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급변하는 국제금융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각종 수단과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결국 도태될 수 밖에 없다. 국제결제은행(BIS)비율 적용은 비록 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미 그 공신력을 인정받아 더욱더 확장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기록한 내용대로 신 협약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국제결제은행(BIS) 자본체제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며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대체할 만한 제도가 등장할 것이다.

현재 우체국 예금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만 적용받고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있지 않지만, 우체국 예금의 미래와 여타 시중은행과의 경쟁력에 뒤지지 않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기준안에 맞춰 우체국예금·보험 건전성 기준(안)을 재정 시행함으로써 시중은행과의 괴리를 줄이고 시중은행과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제적 금융 규제가 나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새로운 규제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할 때이다.

참 고 문 헌

- 박병수, 「국내은행의 리스크 관리 현황 및 향후 과제」, 전국은행연합회 2006. 12
 이승국, 「Basel II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금융감독원 2007. 6
 신BIS 길라잡이, 금융감독원 2005. 4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 금융감독원 2007. 6

한손에 잡히는 신BIS, 금융감독원 2007. 12

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2004. 6

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2005. 11

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2006. 6

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

은행 검사 매뉴얼